

# 대한민국

## 2014 년도 국제종교자유보고서

### 개요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종교에 의한 차별을 금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600 여 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계속해서 교도소에 수감하고 있었다. 7 월에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징역 18 개월을 선고한 하급 법원의 원심을 확정했다. 1 월에 박근혜 대통령은 병역거부로 수감 중인 여호와의 증인 신도 100 여 명을 대상으로 형기를 1~4 개월 단축하는 특별 사면을 실시했다.

종교 지도자들은 정기적인 회합을 통해 종교 화합을 모색하고 있다. 일부 기독교 단체는 사이버 공간에서 무슬림을 공격했으며 8 월에 교황이 방한하자 가톨릭 반대 집회를 열었다.

주한미국대사관 관계자들은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를 포함하여 종교의 자유에 관한 현안들을 정부 및 종교 지도자들과 협의했다.

### I. 종교 인구 분포

미국 정부는 한국의 전체 인구를 4,900 만 명(2014 년 7 월 추정치)으로 추산하고 있다. 2010 년에 실시된 조사에 의하면, 전체 인구 대비 신자 비율은 대략적으로 불교 24%, 개신교 24%, 가톨릭 8%로 조사됐으며 43%는 종교가 없다고 응답했다. 원불교, 유교, 증산도, 천도교, 대종교, 여호와의 증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몰몬교),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대순진리회, 통일교, 이슬람교를 믿는 인구는 모두 합해 전체 인구의 1% 미만이었다. 또한, 거의 전원이 주한 외국인으로 이뤄진 소수의 유대인들이 체류하고 있었다. 무슬림 인구는 135,000 명으로 추산되며 그 중 10 만 명은 주한 외국인과 이주노동자였다.

### II. 종교의 자유에 대한 정부 인식 현황

#### 법적 토대

헌법을 비롯한 기타 법률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며 종교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교는 인정되지 않으며, 정부는 어떠한 종교에도 교부금을 지급하거나 특혜를 제공하지 않는다. 헌법은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은 다양한 종교간의 협력을 지원하여 종교간 대화와 이해를 확대하고 있다.

법률에 의해 20~30 세 사이에 속하는 사실상의 모든 성인 남성은 병역의 의무가 있다. 복무기간은 병과(兵科)에 따라 21~24 개월이다. 법률은 대체복무나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병역의무를 거부한 위반자는 최고 3년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18 개월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병역의무 및 예비군 복무 의무가 면제되며 추가로 벌금이나 기타 처벌을 받지 않는다.

현역 복무를 마치고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예비군 복무 의무는 8년 동안 계속되며 1년에 몇 차례 훈련을 받는다. 벌금은 관할구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최초 고발의 경우 일반적으로 20 만원(\$184) 선이다. 고발 횟수가 늘어날 때마다 벌금이 10 만원~30 만원(\$92-276)씩 증가한다. 법률은 위반자를 200 만원(\$1,840)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상습범으로 간주되는 경우 재량에 따라 벌금형 대신 1 일에서 3년 사이의 징역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도 있다.

보존법에 따라 불교 사찰 등 문화재의 보존 및 유지를 위해 정부 교부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종교단체나 외국인 종교 관계자에게 허가를 받거나 등록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정부는 공립학교에서 종교 교육을 허용하지 않는다. 사립학교는 자유롭게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다.

### 정부 관행

정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구속하고 수감했다. 법원은 대부분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18개월 형을 선고했다. 징역형을 마친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더 이상 추가로 병역의 의무는 지지 않지만 전과 기록이 남기 때문에 공직 진출이나 공무원 임용에 제한을 받는 등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다. 여호와의 증인 산하기구인 워치타워인터내셔널의 보고에 의하면, 9월 30일 당시 여호와의 증인 신자 576명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으며 16명은 재판이 진행 중이고 197명은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었다. 전체 건수는 2013년의 583건보다 증가했다.

6월 11일에 서울중앙지법은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양심적 병역거부자 50명이 2013년 12월에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당해 연도 말항소심이 진행 중이었다.

6월 13일에 여호와의 증인 신도 333명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8월에 15개 인권·시민 단체들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수백 명의 양심수를 사면할 것을 촉구했다. 한 시민단체에 따르면 1월에 박근혜 대통령은 양심적 병역거부로 수감 중인 여호와의 증인 신도 100여 명을 형기보다 1~4개월 앞당겨 가석방했다고 밝혔다.

6월에 헌법재판소는 부산구치소가 형이 확정된 수형자에게는 매주 수회 종교 집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도 미결수에게는 참석 횟수를 매월 1회로 제한했다며 2012년 4월에 한 미결수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형이 확정된 수형자와 미결수에게 동등한 참석 기회를 보장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NGO 워치타워인터내셔널은 1950년 이래 한국에서 18,060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추산했다.

8월에 퓨 연구소는 한국 정부가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수준은 낮다고 보고했다.

### III. 종교의 자유에 대한 사회적 인식 현황

2013 년 11 월에 갤럽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수감 대신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제도에 찬성하는 비율이 2008 년에 실시된 비슷한 설문조사와 비교하여 29 퍼센트에서 68 퍼센트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에 따르면 일부 기독교 단체는 사이버 공간에서 무슬림 사회의 종교의 자유를 비난했으며 8 월에 교황이 방한한 동안 가톨릭과 교황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인터넷 게시물을 게재했다.

10 월경 국가인권위원회는 직장에서의 종교적 차별과 관련된 11 건의 진정이 접수됐다고 보고했다. 그 중에는 고용주가 직원에게 종교 확인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사례가 있었다. 그 외에 고용주가 직원에게 종교 행사에 참석할 것을 요구한 사례도 있었다.

한 무슬림 단체는 부산의 어느 식료품점에서 돼지고기에 할랄 라벨을 잘못 부착한 사례를 지적했다.

유력한 종교지도자들은 상호 이해와 관용을 증진하기 위해 사적으로, 혹은 정부의 주관 아래 정기적인 회합을 가졌다. 8 월 25~29 일에 아시아 15 개국에서 1,700 명 이상의 종교 지도자들이 인천에서 만나 종교의 자유를 촉구하는 활동 등을 포함하여 아시아의 범종교 화합과 평화를 기원하는 행사를 열었다.

#### IV. 미국 정부 정책

주한미국대사관 관계자들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국회의원 등 정부 당국자들을 정기적으로 만나 종교의 자유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관한 문제를 협의했다.

또한, 대사관 관계자들은 각 종교 단체의 관계자들을 만나 종교의 자유 현황과 양심적 병역거부자 수감 문제를 협의했다. 일단의 종교 지도자들은 8 월에 대사관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의 도입에 찬성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주한미국대사관은 7 월에 여론 지도층, 교수, 정부 당국자를 대상으로 국제 종교의 자유에 관한 아웃리치 이메일을 발송했다.